

[대만]

대만, 올 들어 첫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출처 : 연합뉴스

대만에서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은 중남부 자이(嘉義)현 시커우(溪口)향 토종 닭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들을 1차로 분석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이현 가축질병퇴치소 응여우주(翁有助) 소장은 방역검역국에서 21일 통보를 받고 즉각 농장과 주위를 소독하고 농장 내 5천마리 토종 닭들의 이동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응 소장은 앞으로 3개월 간 AI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46개 농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검역국은 최종 혈액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닭들의 건강 상태와 이상 사망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병원성 H5N1이 아니고 저병원성 H5N2 바이러

[일본]

대지진에 ‘엎친 데 덮친’ 日 지바현, 고병원성 AI 발생

출처 : 머니투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지바시 와카바에 있는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해 죽은 닭이 발견됐다고 지바현 관계당국을 인용해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I가 발견된 것은 일본 내에서는 24번째이며 지바현에서는 두번째다. AI가 발견되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6만2,000마리가 살처분되고 농가 소독 등과 함께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이 진행된다.

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역검역국은 그러나 바이러스가 어느 국가 또는 대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역검역국은 3월 17일 대만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의 AI 발생 지역을 방문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해외가축질병발생 상황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및 베트남, 대만, 캄보디아 등 전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및 대만은 오리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1년 1~2월 기준, 대만에서 수입된 오리는 93,652.6kg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50% 올랐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만산 오리고기(냉동) 연도별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베트남,
AI 퇴치 백신 확보용
긴급예산 편성

출처: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퇴치를 위한 백신 확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일간 탕니엔은 8일 까오드억팻 농업농촌개발부장관의 말을 빌려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AI 퇴치를 위한 백신 확보용 긴급 예산으로 3천100억동(1천490만달러)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천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나 군 부대의 경우 백신주사비용이 모두 면제돼 퇴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팻장관은 기대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예산 편성은 최근 랑선, 남딩, 빙푹, 타이응웬 등 북부 4개 성과 중부 끈툼 성에 AI가 재발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중부 투아티엔-훤성에서 고역, 호흡곤란, 폐렴 등 전형적인 AI 증세를 보여 18일 현지 병원에 후송됐던 15세 소녀가 두시간만에 숨졌다.

숨진 소녀는 지난달 초에도 유사 증상을 보여 휘의대 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지 보건 당국은 숨진 소녀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정밀조사를 벌여 AI로 확인했다.



[중국]

중월마트
유통기간 지난
오리판매 적발

출처: 연합뉴스

'가격사기'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중국 월마트가 유통기간이 지난 오리를 대량으로 팔다 적발돼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고 중경만보(重慶晚報)가 10일 보도했다.

충칭시에 따르면 월마트 충칭 지우룽광창(九龍廣場)점은 유통기간인 10일이 넘는 소금에 절인 오리를 재가공을 거쳐 튀김오리로 팔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지우룽광창점 작업실 냉동고에서는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던 소금에 절인 오리 1천900여마리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유통기간이 이미 한달이 넘는 것도 100여마리였다.

시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최대 5만위안(85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와 까르푸의 일부 점포는 최근 가격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가격 사기'가 적발돼 점포당 최대 50만위안(8천7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가격사기 사건을 계기로 외국계 할인점들이 중국인 직원들에게 20년 전 수준의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조의 단체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외국자본 정서를 부채질하는 모습도 보였다.